

제주도의 보전과 개발

오 홍 석

(이학박사, 전 동국대교수 겸 학장)

제주학회창립50주년을 맞이하여, 창립멤버이면서 3대회장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회(感懷)에 젖어들게 만든다. 동시에 과거를 회상하며, 당면과제에 대한 해법과 병행하여, 건전한 미래상을 구상해본다. 이를 위해 먼저 ‘오늘에 이르는 과정’부터, 점검하게 됐다. 첫째로 떠오른 것은 산업화인데, 이를 외면할 수 없게 됐다. 자급자족을 앞세워온 전통방식에서 벗어나, 이익에 우선하는 대량생산체제방식을 도입한 사실과 관계된다.

하지만 퇴비(堆肥)에 근거한 전통방식으로, 목표달성이 어려운 것은 물론 시대흐름에도, 역행(逆行)하게 됐다. 그래서 강구한 것이 화학비료사용이며, 구충(驅蟲)을 위한 농약사용이었다. 이것이 과학에 근거한 영농방법이며, 대량생산으로 이어지게 만들었다. 이런 방식은 노동력을 절감(節減)하는데 장점이 있음으로, 부담을 줄여주는 농민들에게 ‘선호풍조로 이어’지게 됐다.

결과는 ‘전통방식의 유기(有機)농업’을 밀어내는 대신, 화학비료와 농약(農藥)사용을 부추기며 ‘오늘의 시대상’을 낳게 했다. 이것이 그동안정정(purity)성을 유지해온 농업생산에 ‘부정적 측면’을 키워온 전환점이 됐다. 이런 유형의 농업은 감귤농원에서 먼저 시작됐는데, 생산기술과 농가소득측면에서 ‘선구자(pioneer)위치에 있어’왔다. 이것이 긍정적이며 선진(先進)화된 모습이다하더라도, 환경적 측면에서는 부정적이다.

다시 말해서, 온난기후에 대한 ‘적절한 이용’과 더불어, 농가소득을 높여온 점에서 긍정적(positive)이다하더라도, 감귤농민은 물론 이웃주민들에게 독성(毒性)피해를 안겨주며 ‘공동의 환경을 오염시켜온 점’에서, 부정적(negative)이다. 주변의 총체조건을 ‘환경으로 규정’할 때, 이에 대한 ‘효율적 이용’을 전제하며, 다양성(多樣性)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됐다. 이것이 오늘날에 강조하는 ‘환경에 대한 종합적 관점의 영향평가(impact assesment)’이다.

근본으로 소급할 때 ‘인간이 갖는 동물속성’에 있다. 이것이 체내흡입(inflow)과 체외배출(outflow)로 이어지는 생리현상인데, 어떤 상황이든 이를 외면할 수는 없게 됐다. 이것이 신진대사(新陳代謝)이며, 살아서 ‘활동하는 실체’임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산소인데 ‘숲에서 공급받는 것’과 대조적으로, 인간이 배출한 탄산가스의 경우 ‘숲과 농작물 등 식물계에서 필요’하다. 이것이 인간과 자연에 걸쳐 공존(共存)하며, 상호의존성을 보여주는 생태계(ecosystem)의 현상이다.

여기에서 ‘활동에 필요한 것’이 에너지(energy)임으로,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원천이 되는 ‘식량생산에 주력’하게 된다. 또한 ‘생산량을 증대시키려는 의욕’에 젖어든 것이 인간본능 임

으로, 비료와 농약에 걸친 ‘화학제품사용이 불가피’하게 됐다. 또한 온실(green house)재배를 위하여, 비닐까지 동반하게 됐으므로 ‘화학물질로 인한 부작용’은 심각단계에 이르렀다. 비닐제품은 타거나 녹지도 않는다. 오직 생산된 그대로 잔류(殘留)하게 됨으로 ‘쓰레기의 양산(量産)’과 더불어, 수중(水中)생태계까지 교란하게 됐다.

둘째는 기동화(機動化)에 있다. 기계를 ‘작동하기 위해서 원동력이 필요’한데, 이것이 ‘모터(motor)로 알려진 발동기’다. 발동기를 가동(稼動)하기 위해서는 석탄을 시작으로, 석유-가스-전기 등을 활용해왔다. 영국은 발동기를 이용한 산업혁명을 통하여, 공장제품의 대량 생산에 주력해왔다. 하지만 ‘흑향(黑鄉)을 낳게 한 부정적 측면’이 도사리게 됐다. 근본에서 ‘석탄을 동력’원으로 삼고 매연(smoke)’을 배출한데서, 비롯된 부정적 측면이다.

제주도에도 1917년에 ‘일주(一周)도로를 개통’했는데. 이때를 기하여 교통장비로서 ‘자동차가 등장’했다. 이것은 접근성을 용이하게 만들었지만 ‘연료(燃料)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가 ‘환경문제의 시발점’을 낳게 했다. 또한 ‘지역구조에 변화’를 가져오게 만든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동안 지속되어온 삼읍(三邑)시대에는 교통-통신수단으로 ‘말의 등을 이용’하는 한편, 보행(步行)에 주력해왔기 때문이다.

이후 일제강점기를 맞이하면서, 행정구역이 ‘면제(面制)로 전환’되고, 사회적 상황마저 달라지게 만들었다. 이때에 말단행정중심지로서 ‘면소재지가 등장’했는데, 이들은 모두 ‘해안의 일주도로변에 자리’했다. 이때를 기하여 명월-홍로-의귀 등 내륙에 놓였던 면소재지마저, 한림-서귀-남원 등 임해(臨海)지역을 향해서 옮겨갔다. 이것은 상대적 위치에 놓인 내륙촌락으로 하여금, 기능상실과 더불어 쇠락(衰落)으로, 이어지게 만들었다.

이에 반해서 임해촌락의 경우, 사리도(沙泥道)단계에 머물렀더라도, 자동차위주의 육상교통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물론, 항만(港灣)기능까지 겸치게 됐다. 일본을 향한 노동이민이 활기를 띠면서, 해외진출을 위한 항해가 필요한데 따른 것이다. 그만큼이나 교통장비로서 우마(牛馬)를 대신해서, 자동차와 기선(機船)은 물론, 이후에 항공기까지 등장하게 만들었다. 결과는 주민들에게 시간단축과 더불어, 편익(便益)성을 높이게 됐다.

또한 ‘해안지역의 개발’시대를 여는 전환점이 되기도 했는데, 이것이 개발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낳게 만든 전환점이다. 하지만 ‘부정적 측면을 동반’하는데서 문제가 시작됐다. 매연(smoke)-소음(noise)-분진(dust) 등은 대표적이다. 매연(煤煙)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인간호흡과 직결’되며, 순환(循環)과정을 통해서 ‘광범위한 피해’를 안겨준다. 이것이 건강을 염원하는 일상에서, 매연문제를 외면할 수 없는 근거가 됐다. 여기에다 관광시대를 맞으면서, 운반수단으로 차량이 급증추세를 낳게 됐다. 이것 또한 유해(有害)한 ‘배기가스의 증가추세’를 병행하게 만든 계기가 됐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체의 경우 ‘순간적 호흡(呼吸)’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장비의 증가추세와 더불어 조화(harmony)되지 못할 경우 ‘상호간에 상반된 모습’을 보일 것은 당연하다. 중요한 것은 지구표면을 덮고 있는 공기덩어리(airmass)가 특정장소에 ‘정지된 상태로 놓여’있지 않고, 순환원리에 따라 이동하며 가변성(可變性)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의 특성도 이런 현상과 관계된다. 하지만 주민들이 ‘유독한 매연을 체감(體感)’하지 못하는데서, 문제를 키우고 있다. 밤낮으로 풍향을 달리하는 해륙풍, 산곡(山谷)풍이 겹치는데 따른 것이다. 이것은 ‘바람 많고 거센 도서(島嶼)환경’을 낳게 했고, 이로 인해서 독성물질을 이동시키면서, 주민들에게 실감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독성은 ‘전체의 지구를 향하여 축적’되는데서, 지구의 부분인 제주도역시 이런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

셋째는 도시화(urbanization)에 병행하여, 지역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온 점이다. 육해공(陸海空)에 걸친 교통망이 발달하면서 ‘교통요지에 도시화’를 불러온데, 따른 것이다. 교통요지에는 행정기능까지 겹치면서 ‘신흥취락으로 위상’을 굳혀 왔다. 서귀포-한림-모슬포-성산 등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해온 사례’로 남고 있다. 여기에다 광복이후에는 제주도가도(道)승격과 더불어 ‘자치도로 격상(格上)하는 전환점(turning point)’을 맞게 됐다.

이것은 시군(市郡)에 걸친 산하기관의 행정구역개편으로 이어졌고 ‘한라산을 경계로 남북에 걸친 분할시대’를 낳게 했다. 남단에 위치한 것이 남제주군이고, 오늘의 서귀포시관할이다. 하지만 통치거점인 제주읍성으로 왕래하는데, 일주도로를 이용했어도 ‘5-6시간이 소요’될 정도로, 공간제약이 컸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직통의 5-16횡단도로’를 개통했다. 이를 계기로 소요시간이 1시간대로 단축되며 ‘급격한 변화시대’를 낳게 했다.

이를 계기로 섬 가운데의 한라산을 횡단하며, 남북을 연결하는 간선(幹線)통로기능을 담당하게 됐다. 동시에 시간단축으로 이어지게 만들었으므로 ‘혁명적 사건’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토지이용에 대한 ‘재편성(reformation)을 보여 온 전환점’으로, 주목을 받게 됐다. 기존의 토지이용(land use)방식은 한라산이 한가운데에 솟아오른 상황에서, 고도와 경사각에 제약받아 왔으므로 ‘환경에 대한 순응(adaptation)의 자세’를 보여 온 모습이다.

그 결과는 해안에서 산지를 향하여, 경작지-초지-삼림대를 펼치는 대상(帶狀)분포를 보였다. 이것이 ‘토지이용에 대한 기존(既存)구도’였다. 하지만 성판악을 경유하는 ‘제1횡단도로 개통을 시작’으로, 제2-제3에 걸친 횡단도로가 개통되면서 ‘새로운 변화시대’를 맞게 했다. 도로를 이용해서 ‘편리해진 접근(接近)성’과도 관계된다. 한라산을 향해가는 등반코스만 하더라도, 그전에는 해안에서 시작됐다. 그랬던 것이 제2횡단도로(서측)건설을 계기로 ‘1100m 고지대로 옮겨’갔고, 그런 결과는 고도와 경사도에서 ‘상향(上向)으로 이어’졌다.

이런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등반이 쉬어진데 따른 ‘남녀노소에 걸친 무분별한 등반’으로 인하여, 정상에 놓인 ‘백록담까지 한 때에 훼손’하게 됐으므로, 이것이 부정적 측면이다. 다른 한편으로 초원지대(grassland)마저, 마을공동목장에서 ‘골프(golf)장으로 전환되는 변화시대’를 맞게 했다. 농가마다 ‘개인적인 지분(持分)을 소유해왔었지만, 이를 외면한 채로 ‘초원(草原)지대를 부정한 양도과정’을 거치게, 만들어온 것이 문제였다.

보다 중요한 것은 환경적 측면에서, 드러난 부정적영향이다. 잔디로 조성된 골프장관리를 위해 ‘살충제(殺蟲劑)와 같은 화학제품’을 활용한 것이 요인이다. 이들 유해물질은 공기를 매개(媒介)로 삼은 순환(circulation), 수시로 내리는 빗물에 의해서 ‘삼투(osmosis)로 이어’지게 된다. 그런 결과는 대기와 토지는 물론, 하천과 해양에 걸친 수계(水界)까지, 연쇄반응을 불러오는 동시에 오염(汚染)확산으로, 이어지게 만들었다.

이와 같은 개발흐름에 따라, 일주도로가 통과하는 해안보다, 내륙을 우선시하게 됐다. 그 증거로서 일주도변에 놓였던 도청을 관덕정에서, 삼성혈너머어로 이전해왔다. 임해(臨海)입지에서, 내륙입지로 향해간 모습이다. 이를 시범으로 삼으면서, 남(南)제주에서도 배후지(hinterland)에 놓인 후평(後坪)을 향해서, 주요행정기관들이 이전한 답습(踏襲)상을 보였다.

이것이 한 때이더라도 ‘지역중심지의 입지(location)이동’을 불러온 추세가 되었다. 뉴타운(new town)시대를 맞으면서, 상황을 달라지게 만들었다. 시발점은 6공시대로 소급하며 ‘일산-분당중심의 신도시’는 대표적 사례다. “서울은 만원”이란 작품에서 보여주듯 ‘서울은 전국각지에서 모여든 인구전입’으로, 포화(飽和)상태에 놓였고 ‘산동네의 등장’과 더불어, 불균형의 모습을 보였다. 이것이 주택부족과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낮춘 모습이다. 그런 까닭에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며, 낮게 평가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인간집단을 인구(population)로 표현할 때, 살아서 숨쉬는 ‘생명체들이 모여든 집단’으로, 규정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주변을 둘러싼 총체조건’과 함수관계를 갖게 된다. 이런 총체조건을 환경(environment)으로 규정할 때 ‘인간은 환경을 이용하는 주체(主體)’이고, 주변에 놓인 제반조건의 경우, 이용대상인 환경이며 객체(客體)로 바라보게 됐다. 둘 사이는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때’만,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게 된다. 이를 의식하며 토지와 인구에서, 불균형을 이루는 도심에서 벗어나, 배후지를 향한 신도시조성과 ‘거주공간확대로 이어’지게 만들었다.

인간의 경우 유량하는 동물과 다르게 ‘일정장소에 정착’하며 살아간다. 이것이 안식처(安息處)이며 가족과 함께 ‘안락(安樂)하게 살아가는 주택’이다. 이것을 확보할 때만 ‘내일을 위한 희망’과 함께, 생산적이며 창의적 존재로서 역할하게 된다. 하지만 주택건설은 토지확보를 전제하게 됨으로, 지가(rent)를 외면할 수 없게 됐다. 신도시건설도 지가(地價)가 높은 도심(civic area)보다 ‘염가(廉價)의 주변’을 선택하게 된 것도, 이런데 연유한다.

신제주가 들어선 연동의 경우, 읍성(邑城)남서쪽이고 내륙을 향해가는 곳이다. 하지만 공항(air port)이 인접해있음으로, 중앙무대를 향한 접근성마저 용이하게 됐다. 그렇더라도 ‘1차적으로 확장’되어온 한라산횡단도로와는 방향과 위치에서 어긋나게 됐다. 이것이 일관성이 없으면서 ‘지그재그(zigzag)방식의 난(難)개발’이며, 도시계획임으로 비판받게 됐다

중요한 것은 이런 오류마저 모른 채 ‘제2도시인 서귀포’에서도, 제주시를 시범모델로 삼으며 ‘배후지를 향해서 이동’해간 점이다. 결국에는 ‘주요기관에 대한 재(再)이전계획’을 수립하며, 서쪽해안의 일주도로변을 향해가며 오늘로 이어졌다. 신(新)제주에 대한 시범(示範)이 아니라 ‘잘못된 이전에 대한 모방(模倣)’을 반복해온 점에서, 불명예의 증거로 남게 됐다.

다음으로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떠올려본다. 인간사회가 추구하는 것이 안전과 번영임으로, 조상들의 발자취를 남겨온 과거보다, 현재에 근거한 채로 ‘희망찬 미래를 구상’하는데, 주력하게 된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발전된 모습과 더불어 ‘시대사조에 부합’되는 이상(理想)공간조성으로, 이어지게 만들었다. 예전부터 전해오는 무릉도원(武陵桃源)과도 같은 맥락이며, 인간세계가 추구해온 ‘이상형의 생활공간이며 활동무대’이다.

하지만 무릉도원의 경우 ‘꿈속의 세계’처럼 비현실적이다. 그러므로 실증(實證)을 강조하

는 과학시대에 부합되지 않는다. 오늘의 과학시대는 ‘튀넨이 제시한 고립국이론(theory of isolated state)’에 근거하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중심도시를 한가운데에 두고, 주변을 향해 ‘동심원(同心圓)상의 토지이용’을 펼쳐놓은 것이 요지(要旨)가 된다. 오늘과 유사한 점은 시장경제와 행정에 걸쳐, 중심기능들이 도심(都心)을 향해서 집중된 점이다.

제주도의 현실은 ‘토지유희부터 타원형’을 이루는데다, 한라산이 가운데에 솟아있음으로, 이런 모델의 적용자체가 적절치 않다. 대안(代案)으로 6각형구도(hexagonal frame)를 떠올리는데, 이스라엘국기처럼 ‘정(正)삼각형을 중복’시켜놓은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주시에 ‘모든 것이 편중된 지역구조’가 아니라, 중심기능의 분산을 통하여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추게 됐다.

자연을 이용하는 주체적 위치에 인간이 놓여있다. 이에 반하여 토지공간의 경우, 이용대상이면서 객체(客體)로 바라보게 된다. 이들 주객(主客)의 양자사이에는 ‘균형(balance)을 유지’할 때만, 합리적 이용과 발전을 기할 수 있다. 행정구역에 근거한 ‘불균형을 보이는 사례’로서, 인구분포를 제시할 수 있는데, 양시(兩市)구도에서 제주시에 편중되면서, 서귀포시보다 2.6배에 달하는 모습이다.

동(洞)단위로 보더라도, 제주서관할의 노형동은 서귀포관할의 정방동보다, 21배에 이르고 있다. 이것이 시(市)-동단위에 걸친 ‘인구분포상의 불균형’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사례다. 그럼으로 오늘날에 강조하는 조화-균형의 취지에도, 어긋난 지역구조이다. 동일한 행정관할지역에서도, 과밀(over population)지역이 등장하는 한편 ‘과소(lower population)지역의 등장’함으로써, 상반된 모습과 대립(對立)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어느 것이나 균형을 강조하는 ‘오늘의 시대상(時代相)’에 어긋나는 까닭에,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를 입증하듯, 제주시는 지가(地價)상승률에서 ‘전국최고라는 불명예’를 떠안게 됐다. 부동산에 대한 투기목적지로서 합당할지 모르나, 안전과 번영을 강조하는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는 방법으로, 과밀(過密)하거나 과소(過疎)하지 않는 ‘적정(optimum)수준의 인구유지’가 필요하게 됐다.

여기에 제주-서귀-대정-한림-구좌-성산을 거점으로 삼고, 균형발전을 내다보며 ‘이곳에 근거한 골격(frame)수립’을 구상하게 됐다. 현재 포화상태에 들어간 제주시의 경우, 제2공항부터 건설단계에 들어간 단계다. 이것이 ‘분산정책에 대한 시동(始動)’으로 보이지만, 현장의 토지확보와 도로건설과정에서 ‘지형과 병행하여 삼림(특히 비자림)을 훼손’하는 반대급부를 떠안게 됐다. 이것이 주민반발과 저항에 부딪힌 요인이 되었다. 개발과 보존을 강조하는 양대(兩大)세력 간에, 대립과 마찰을 불러온 ‘단면적 모습’이다.

앞으로 다가오는 것은 ‘개발을 부정하고, 보존(保存)만을 강조’해서도 안 되는 점이다. 반대로 개발에만 편중되어, 환경을 훼손해서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이불이(二而不二)로 표현’하듯, 개발과 보존이 둘이 아닌 점에 유의할 필요성을 느끼게 만든다. 이런 점에서 고전(古典)적 지혜와 함께 ‘저울대처럼 평형을 유지’하는 일야말로, 보존(conservation)개념이면서 ‘환경을 위한 필수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리학의 특성과 관련학자의 역할을 조명해본다. 필자가 전공하는 지리학의

경우, 철학-의학과 함께 그리스시대부터, 출발기원을 열어왔다. 그만큼이나 역사가 오래면서 ‘연구대상이 넓다’는 의미에서 ‘지리학을 박학(博學)으로 표현’해왔다. 인간을 주체로 삼고, 주변에 펼쳐진 총체조건(total conditions)에 대하여, 다각(多角)적이며 종합적 관점에서, 해명하는데 주력하는 학문이기 때문이다.

종합과학의 상징처럼 여겨온 것도, 이런데 연유하며 ‘환경을 연구대상으로 포함’시켜왔다. 인간을 주체로 삼고, 객체(客體)가 되는 주변조건을 바라볼 때, 유기계와 무기계로 크게 양분된다. 무기계는 다시 육권(陸圈)-수권(水圈)-기권(氣圈)으로 분류하는 한편, 유기계는 동물과 식물로 세분한다. 이것이 인간을 둘러싼 총체조건이면서 ‘다양한 요소로 구성’된 환경으로 규정할 때, 크기와 성상(性狀)에서도 서로는 다르다, 이것을 기권(atmosphere)-수권(hydrosphere)-육권(lithosphere)으로, 다시 세분해왔다.

성상(state)에 따라 분류할 경우, 기권은 기체(gas)가 되고, 수권은 액체(liquid)가 되며, 육권은 고체(solid)가 된다. 인간의 활동무대는 ‘고체인 육권’에 치우쳐 있다. 직립(直立)상태로 활동하는 것이 인간속성임으로 ‘단단한 지반을 전제’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경사각이 큰 산지보다 ‘평지를 알맞은 곳’으로 선호해왔다. 동물은 ‘사각(四脚)에 의지’하는 점에서 인간과 다르지만, 토지를 기반으로 삼는 점에서 마찬가지로다.

식물의 경우 정적(靜的)상태에 놓여있더라도 ‘땅속을 향하여 뿌리를 내리는 점’에서, 육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지느러미에 의존하는 어류(魚類)의 경우 ‘하천과 바다중심의 수권’을 선호하는 한편, 양 날개에 의존하는 조류(鳥類)는 지구를 감싼 기권(氣圈)을 활동무대로 삼는다. 중요한 것은 인간도 생명체인 점에서, 이들과 유사하더라도 ‘영장(靈長)동물의 속성’을 갖는 점에서, 차별된다.

여기에 근거하여 장비와 기술을 확보해온 점에서도, 인간계는 차별되며 육지에 한정되지 않고, 수계(水界)와 기계(氣界)에 걸친 영역확대로 이어지며, 활동무대로 삼아왔다. 가능이론(possibilism)에 근거한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의 경제효과와 더불어, 부작용을 낳게 했음으로 ‘긍정과 부정이 혼재’하며, 이원(二元)화된 모습이다. 인간이 지향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이것이 ‘올바른 지혜’이면서, 인간사회가 추구해온 가치관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가올 부정적 측면을 예견(豫見)하지 못하거나, 예견했더라도 외면해온데서 ‘하나만을 알고 둘을 모르는 형국’이 되고 있다. 암시로 다가오는 것이 고전적 지혜인데 ‘둘이더라도 둘이 아니란 뜻’이다. 오늘날에 문제된 환경과 연계시킬 때 ‘개발과 보전을 동시에 병행’하는 취지와도, 상통하게 된다. 하지만 그동안의 상황은 경제효과만을 앞세워 ‘개발에만 집착하며 편중성’을 보이며, 절대경지와 함께 녹색지대(green belt)까지 해제시켜왔다. 이것이 집행을 관장하는 정부입장이고, 이에 반해 환경단체의 경우 개발을 부정하면서 ‘원상태의 보존’을 강조해왔다.

양면에 걸쳐 ‘편견(偏見)에 젖어온 모습들’이다. 이것이 국민으로 하여금 단합은 고사하고, 분열과 대립을 조장하며 ‘정치문제로 비화(飛火)’하게 되었다. 강정에 조성된 ‘항만(港灣)축조는 대표적 사례’인데, 오늘날 정부가 추진하는 ‘남방(南方)정책과도 일치’하고 있다. 여기에 동조하면서 상징건물로서 ‘지남(指南)정을 건립’하는 것이 마땅하건만, 주민들은 아직도

조천에 세워진 ‘연북(戀北)정에 매달려 추억’하는 모습임으로, 구태(舊態)에 젖어온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사고(思考)체계다.

하나를 알고 둘을 모른데서 비롯된 것이다. 환경관련용어마저 ‘일방적 보존(保存)’만을 강조할 경우 <reservation>이 된다. 하지만 개발과 보존의 양면성(兩面性)을 전제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conservation>을 적용하는 것이 온당하다. 이번에 제주학회가 대중사회와는 다르게, 후자를 선택하게 된 것도 ‘정도(正道)를 향한 진일보(進一步)’한 모습이다. 그렇게 된 데는 ‘현직학회장을 비롯한 지리학자역할’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필자는 지리학을 전공했지만, 매머드(mammoth)학회와는 다르게, 소수(小數)가 활동해온 분야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量)적 측면을 우선시’하는 민주체제에서, 뒤로 밀려나게 됐다. 하지만 ‘일관된 신념’으로 노력한 결과, 오늘로 이어졌고 ‘주변으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게 됐다. 제주도로 유배된 ‘조상들이 남겨온 근검면려(勤儉勉勵)정신’을 계승하는 한편, 지리학을 통해서 ‘터득한 개척자(pioneer)정신’까지, 실천해온데 따른 것이다.

이런 신념과 노력에 대한 결실(結實)인지, 필자는 국내지리학분야에서 ‘신제(新制)박사1호의 위치’를 확보하게 됐다. 뒤를 이어 ‘수십 명의 박사배출’로 이어지도록 선도(先導)하며, 학위를 취득하는데 조력자위치에 서왔다. 이때에 총장이 주관하는 “밝은 사회연구소”의 주관으로 학술대회(1976년)를 열었는데 ‘밝은 사회운동과 자연보호’라는 주제로, 필자가 발표를 담당하게 됐다.

인류사회재건이란 ‘원대한 목표’에 초점을 맞춘 연구소였음으로, 개발주도정책으로 인하여 훼손되는 자연에 대하여 ‘보호(protection)하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이것은 선진(先進)사조를 도입하는 ‘선구자로서 역할(役割)’하는 시발점이 되는 동시에, 오늘날의 ‘국내환경론자들을 탄생’시킨 계기가 되었다. 이때부터 필자는 환경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연구소에 대한 관심을 모으게 됐다.

이후 필자는 소속대학변경과 더불어 ‘지역(地域)환경연구소의 설립’으로 이어졌고, 소장(所長)위치에 서게 됐다. 이것이 ‘환경연구에 주력’하게 된 결정적 계기였다. 우선시해온 과제는 연1회로 발간하는 “지역환경이란 논문집”을 통하여, 관련논문들을 연속게재(掲載)하는 일에 있었다. 이때를 기하여 ‘10여 편의 환경관련논문’을 작성했는데, 이것을 토대로 ‘이론정립에 주력하며 전문서적발간’으로 이어졌다, 이것이 “환경인식과 실천의 새 지평”이다.

이 책은 필자에게는 “취락지리학”다음으로, 편찬한 전문서임으로 제2전공인 이 분야에도, 확고한 위상을 굳히게 됐다. 필자의 환경관련저서는 대내외로 알려지면서 ‘수많은 수강생(受講生)’들이 몰려들며, 당시 봄 조성으로 이어졌다. 대내적으로 대강당에서 강의를 진행하는 한편, 이후 5-6개의 분반(分班)을 통해서 ‘수많은 강사배출로 이어’지게 만들었다.

대외적으로는 방송통신대학에서 ‘전국상대의 환경강의’를 진행했는데, 관련내용을 외연(外延)확장하는데도 기여해왔다. 또한 소장으로 취임한 연구소를 “환경영향평가대행기관”으로, 정부의 공식승인을 받기에 이르렀다. 당시 정부가 승인한 환경영향평가기관의 경우, 전국에 걸쳐 22개소에 불과했다. 그만큼이나 희소가치를 발휘할 정도로, 장래에 대한 기대치가 컸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토목-건축분야를 통하여 ‘개발을 주도하는 대기업’에서, 환경영향평가까지 대행하는 조치가 내려짐으로써, 평가기관은 일시에 ‘100여개로 증가’했다. 환경영향평가는 ‘무리하게 진행하는 개발’을 견제하고, 보전과의 조화를 이루면서 ‘양면에 걸친 균형’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개발을 주도하는 대기업에서, 환경영향평가까지 관장한 마당에, 이익에 우선하며 ‘개발주도의 흐름’으로, 이어질 것은 당연하다.

이런 상황에서, 개발에 대한 합리적 견제(牽制)를 통하여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내기란, 쉽지 않게 됐다. 오직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방식’에 젖어들며, 정경(政經)유착으로 이어지게 만들었다. 그런 결과는 원리원칙과 함께, 공정성을 앞세우는 순수학계로 하여금, 뒤로 밀려나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사업의 존속과 번영을 내다본다면, 사회적으로 비판받는 ‘폴리페서(police-professor)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전통학자로 알려진 율곡이 ‘강조한 건리사의(見利思義)’처럼, 이로움을 보았을 때 의(義)를 생각하는 것이 정통과교수이었다. 하지만 이런 유형의 교수들은 오히려, 뒤로 밀리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었다. 당시 환경문제를 주도하는 장관마저, 여배우출신이 맡고 있을 때였다. 환경운동에 참여해온 경력, 집권세력과의 ‘돈독한 인연만’으로, 장관직에 오르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익을 앞세우는 기업’과 밀착으로, 이어지게 만들 것은 당연하다.

환경청(이후 부로 개편)이 새롭게 발족하면서, 이에 대한 경험부족에서 오는 ‘부작용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당시 앞서간 일본에서는 ‘우리와 상황을 달리’하고 있었다. 수상(首相)자리에 있었던 미끼(三木)가 자진해서, 환경장관자리로 내려오면서, 기강확립과 질서를 바로잡는데 앞장서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사례를 시범으로 삼았던들, 우리환경부에서 일어난 ‘무질서하고 몽매(蒙昧)한 장면’이란, 등장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

이때를 기하여 필자는 ‘연구소운영까지 포기’한 채로, 오직 연구에만 주력하며 순수학자로서 살아왔다. 그런 결과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50여 편에 이르는 논문’을 작성하는 한편, 이를 근거로 ‘25권에 이르는 저서’를 출판하게 됐다. 하지만 성인(成人)인구의 ‘40%가 무독서(無讀書)계층’이고, 독서계층마저 8권에 그치는 것이 한국임을 고려할 때, 과급효과를 기대하는 자체가 무리였다. 오직 성인층독량에서 ‘연간60권에 이르는 이스라엘’을 선망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것이 인류가 선망하는 노벨상수상국으로, 위상을 굳히게 된 근거였다.

참고로 ‘세계의 흐름’을 통하여, 알맞은 수용방법을 떠올려본다. 학회의 연구대상으로 삼는 제주도의 경우 ‘한국영토의 한 부분’이다. 이것이 확대될 경우 국토가 되고, 대륙과 지구로 연계되면서 ‘하나의 통합체’를 이루게 된다. ‘하나뿐인 지구(only one earth)’가 등장하며,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된 것도, 이런 원리에 근거한 것이다. 환경과 연계시킬 때 오염(汚染)지역이 있다면, 청정지역이 있게 마련임으로 ‘둘이 별개로 존재’할 수 없게 됐다.

오염은 선진화된 지역에서 먼저 발생해왔다. 영국이 산업혁명을 계기로, 효율적 생산을 앞세워 ‘경제적 풍요’를 실현하는데 주력해왔더라도, 환경측면에서 부정적이다. 공장가동을 위해서 매연(smoke)을 배출하는 한편, 폐수까지 동반함으로써 ‘대기와 수계(水界)에 걸친 오염’을 확산시켜왔기 때문이다. 그런 결과는 하늘과 들판에 걸쳐 ‘검게 물들인 흑향(黑鄉)’을 등장’시켰는데, 이것이 대기오염(air pollution)증상으로 확인됐다.

다른 한편으로 수질오염(water pollution)을 불러왔는데, 영국을 대표하는 템스 강에서 드러났다. 중요한 것은 대기오염만 하더라도, 분진(dust)까지 겹치는데서, 문제를 확대시켜온 점이다. 청정한 대기를 흐려놓음으로써, 시계(視界)를 악화시키는 동시에, 호흡기를 통한 ‘분진의 체내유입’으로, 주민건강을 악화시켰기 때문이다. 이와는 반대로 미국의 LA는 ‘백색의 연무(軟霧)도시’로 알려지며, 부정적 평가를 받아왔다.

수많은 자동차의 배기가스가 안개와 결합되면서 발생한 것이다. 그래서인지, 명칭마저 연기와 안개가 혼합된 ‘스모그(smog)도시’로 지칭’하게 됐다. 영국공업지대의 흑향과 비교할 때 ‘시계(視界)의 혼탁성에서 낮다’하더라도, 인간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서는 크다. 석유에 근거한 ‘화학물질이 연소과정’을 통해서, 독성(毒性)확산으로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오늘의 자가용시대는 ‘대기오염을 확산’시키는 증거로 남고 있다. 간과해서 안 될 점은 대기오염이 인간시계(視界)를 흐리고, 건강장애를 가져오는데, 그치지 않는 점에 있다. 오염물질인 탄산가스의 경우, 기온상승을 부추김으로써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까지, 불러오고 있다. 영향력은 극지방의 빙산(冰山)을 녹아내리게 함으로써, 해면(海面)상승으로 이어지게 하는 한편 ‘저지대의 침수’를 불러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질소산화물의 경우 성층권을 향하여, 오존층파괴로 이어지게 만들고 있다. 이것은 다시 자외선(紫外線)차단막을 붕괴시키면서 ‘오존층에 구멍’을 뚫어놓았다. 이런 현상은 이제 남극권에서 ‘구체적 사실’로 드러났는데, 자외선차단막상실로 이어질 것은 당연하다. 그것은 다시 생물체를 향하여 물 폭탄처럼 ‘여과(濾過)없이 쏟아 붓게 됨’으로, 염색체(染色體)의 감소와 더불어 발육저하로 이어지게 만들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먹이사슬을 통하여 새우-게 등 수중생물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멸종(滅種)위기에 봉착’하게 됐다. 중요한 것은 인간에게도 악(惡)영향을 미칠 만큼, 환경은 중요한 위치에 놓이게 된 점이다. 자외선노출의 경우 피부암촉발요인이 됨으로, 오늘날에 이런 ‘불치(不治)병이 만연’하게 된 것도, 환경악화와 별개일수 없게 됐다. 그래서 환경문제는 지역과 국가를 초월하여 ‘범세계적이며 인류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1968년 파리에서 개최된 UNESCO회의에서 선정한 ‘주제는 순수생물’에 있었다. 그런 까닭에, 인간을 포함해온 오늘의 추세와는 다르게, 생물(生物)계에 한정되었다. 주제(主題)마저 ‘동식물보호에 초점’을 맞추었으므로, 개발과정에서 훼손(毀損)되는 동식물을 의식해온 데 따른 것이다. 동식물을 포함하는 생물학분야에서 ‘조직을 주도’해온 것도, 이런데 연유한다.

1972년에는 스톡홀름에서 국제회의가 열렸는데 ‘인간환경으로 주제가 전환’됐다. 이것이 ‘인간주도의 환경개념’을 적용하게 된 전환점이었고, 오늘날에 적용되는 환경개념과 맥락을 같이하게 됐다. 인간을 주체로 삼고, 이를 둘러싼 ‘총체조건을 의식’해온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같은 ‘복합적 분류체계를 제시’한 것이 지리학분야에서 주도해온 얼(Earl)이다.

그는 주요항목으로 위치-지형-기후-수리-토양-암석-식생-동물 등의 자연환경을 제시함과 동시에, 취락-공장-학교-도로-농작물-경작지 등의 인문환경을 포함시켰다. 이것은 ‘지리학의 분류방법’처럼, 크게 양분되고 있다. 미국의 환경운동 또한 지리학자에 의해서, 주도해왔으므로 ‘우연한 일치’로 바라보지 않게 됐다. 주인공위치에 Marsh가 있었는데 “인간과 자

연(man and nature)”이란 책을 저술할 정도로, 이 분야에서 전문성까지 갖추어왔다.

거기에도 4선의원인 관계로, 이론에 근거한 정책수립에서 ‘앞장서며 개척자(pioneer)위치’에 놓여있었다. 그가 우선시해온 것은 서부대평원에 서식해온 ‘들소감소에 대한 예방책’이었고, 이것과 병행하여 2차세계대전이후의 무질제가 몰고 온 ‘환경훼손을 방지’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런 결과는 동조세력의 집결에 의한 ‘환경운동가(ecoactivist)의 배출’과 함께, 단합으로 이어져 ‘환경운동의 효율성’을 높이며, 세계를 주도해왔다. 이런 점을 참고하며, 제주학회회원들도 ‘올바른 도민선도(先導)’에 나설 때임을 각성할 때이다.